

ISSUE BRIEFING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계승사업의 과제

- 계승사업의 체계화와 장소의 기억화 -

이슈브리핑

2021. 05. 14 vol.246

연구진
장세길_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1. 민주화·인권 운동 계승사업의 필요성

■ 한국의 인권사상과 민주주의의 뿌리, 동학농민혁명

- 영국 대헌장(1215), 미국 독립선언(1776), 프랑스 인권선언(1789) 등 서구 근대국가는 시민혁명에서 비롯됨. 이 혁명의 공통점은 천부인권과 평등권이 중심인 국민주권국가를 내세운 데 있음. 세계 4대 근대혁명으로 평가받는 동학농민혁명도 천부인권과 평등권을 내세움
-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열린 기념식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동학농민혁명을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 둘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 운동, 셋째, 우리나라 최초의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으로 정의하며,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이 동학농민혁명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함
-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의 인권사상과 민주주의의 뿌리임. 근현대 민주화·인권 운동의 계승이 곧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계승임.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인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에서 이어진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을 계승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음

■ 전라북도 시대정신과 지역 정체성 정립

- 시대정신(zeitgeist)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을 말함. 지난 시대의 정신을 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현재의 지역 정체성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기반임
-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을 계승하여 지역 정체성으로 ‘인권도시’를 내세우며 관련 사업을 추진함. 부·마 민주항쟁의 중심 부산시 역시 당시 시대정신을 계승하여 ‘민주화의 성지 부산’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내세움
-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이후 근대화 속에서 지역침체의 길을 걸었으나 어느 지역보다 앞서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앞장섬. 당시 전라북도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자긍심을 높이는 지역 정체성으로 구축해야 함

■ 역사적 기록의 소멸과 기억의 상실 해소

- 과거에서 진보한 역사는 현재를 디딤돌 삼아 미래를 추구함. 그런데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불편한 과거를 외면하는 ‘역사 편식 증후군’이 적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실에 근거한 역사의 기록화가 필요함

- 역사의 기록화와 더불어 장소를 보존하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사적이거나 공적인 기억은 언제나 장소에 기반”하며, “장소를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장소와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임¹⁾
- 인권 침해 사건, 민주화·노동·농민 운동은 누군가에게 불편한 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기록과 장소를 기억하는 일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발판이 됨. 전라북도의 한 시대와 관련한 기록이 소멸하고 기억을 잃기 전에 계승사업이 이뤄져야 함

■ 지역 브랜드 자원으로로서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 제주 4·3사건,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부·마 민주항쟁, 광주 5·18민주화운동 등 지역마다 민주화운동을 지역 브랜드로 구축함. 전라북도에서는 민주화운동이 활발하였는데도 지역 브랜드로 인권과 민주화운동이 구축되지 않음
- 한국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이자, 민주화·인권 운동의 선도지역이라는 점을 반영,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지역 브랜드를 구축해야 함. ‘인권도시 광주’, ‘민주화의 성지 부산’처럼 전라북도의 정신적 정체성이자 브랜드가 필요함
 -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 민주화운동 성지순례를 비롯해 감옥, 재난, 묘지, 인종차별 등 어두운 과거와 참혹한 역사적 현장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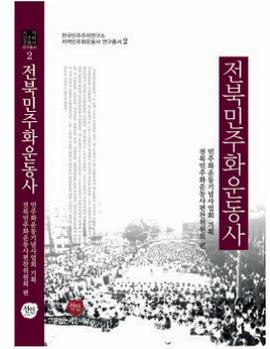
■ 민주화·인권 운동 관련 지역 내 계승사업 미흡

- 김부남 사건,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 사건 등과 관련하여 지역 여성 단체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권과 관련한 사업은 대부분 여성 인권에 맞춰짐. 최근에 6·25 양민학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체계적인 기념사업은 아직 이뤄지지 못함
- 2005년 창립한 전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4·19 김주열열사 묘역 참배, 이세종열사 추모식, 5·18기념식, 6월 항쟁 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전라북도 후원을 받아 ‘민주화 운동사료 목록집’을 펴냈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하여 『전북민주화운동사』(2012)를 펴냈으나, 이후 종합적이고 체계적 계승사업이 미흡함
- 민주화·인권 운동 계승 관련 종합 계획과 더불어 역사적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기억화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념·교육 사업이 필요함
 - 전북대학교 내 이세종열사 관련 표지판 설치 등 장소의 기억화 사업이 단발적으로 추진되었을 뿐, 종합적인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은 없었음

1) 신지은(2011), “장소의 상실과 기억 : 조르주 페렉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45(2): 232-256.

○ (전북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전북민주화운동사』 발간

- 200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한 '전북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기초자료 조사 작업'을 기반으로 2011~2012년 진행
- (1부) 제1공화국~제3공화국 시기까지 전개된 전북지역의 민주화운동. (2부) 1972~1979년까지 유신체제기에 전북지역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 (3부) 1980~1992년까지 전북지역에서 전개된 학생과 재야 세력 중심의 반독재민주화투쟁. (4부) 1980~1992년까지 전북지역에서 전개된 농민운동, 노동운동, 종교·인권운동, 교육운동, 문화예술운동, 여성운동 등



2. 전라북도의 민주화·인권 운동 현황

■ 전라북도의 인권 관련 주요 사건²⁾

- 국가기록에 따르면 한국전쟁 기간(1950~1953)에 사망한 민간인은 37만여 명, 전라북도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5만4,678명으로 전라남도(8만4,00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2010년 진행한 실태조사가 진실 규명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사건별로 전수 조사함

인권 피해 장소	주요 내용
전주형무소 (전주교도소)	• 개전 초기 군·경과 북한군이 차례로 수형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참사. 피해자가 2,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이리역 (익산역)	• 익산역 폭격 사건은 미군 폭격기가 당시 이리역에 폭탄을 퍼부어 4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기타 지역의 피해 장소	• 완주·임실·무주·김제 등 국군과 북한군, 좌·우익 간 충돌로 다수 희생 • (사건사례) '고창 월림 집단희생 사건'(1951년 전북경찰국 전투대대가 마을주민 89명을 집단 총살(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문서))

- 여성 인권 관련 사건은 남원에서 있었던 김부남 사건(1991)과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 참사(2000, 2002)가 있음. 김부남 사건은 아동 성폭행의 후유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1년 후 일어난 유사 사건과 더불어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군산 참사는 성매매 여성 인권이 여성운동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성매매 여성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이 마련됨
- 군부독재가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에 대하여 감금·고문·구속·테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종교계가 군부독재 규탄과 인권 수호 활동에 나섬. 대표적인 활동이 월요기도회로, 유신체제기에 전주가톨릭센터를 중심으로 열림

2) 인권과 관련한 주요 사건은 언론 보도를 참조하였으며, 인권 사건에 대한 평가는 「전북민주화운동사」를 참조하였음

〈표1〉 전라북도 인권관련 주요사건

- 장애인 인권 관련 사건도 적지 않음.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전주 자립원 사건이 대표적임. 원장과 국장이 2009년부터 수년에 걸쳐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2012년에 내부고발로 드러남. 장애인 보호시설 이사장과 원장 등이 장애인을 학대, 강제 노역,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장수판 도가니 사건’(2019)도 있음

▣ 전라북도의 민주화운동 경과와 현황³⁾

- 1960년대 이후에 있었던 전라북도 내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을 보면 전라북도와 관련한 인물 및 사건이 주요 민주화운동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함.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1960)에 대한 전국 최초의 시위가 전북대에서 열렸고, 4·19 혁명의 도화선인 김주열 열사가 전북 남원 출신으로 현재 묘역도 남원에 있음
-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신 계엄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비상계엄 반대시위를 열었으며, 유신 치하 첫 번째 성직자 구속피해(은명기 목사, 전주 남문교회)도 전라북도에서 나옴. 1980년 5월 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도 전북대 출신 이세종 열사임. 이처럼 군부독재에 맞서 어느 지역보다 민주화운동에 앞선 지역이 전라북도임

3) 전라북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과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전북민주화운동사』에 수록된 민주화운동 기록 중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재구성 하였음

구분	주요 사건	일시
1960년대	• 3·15 부정선거 관련 고등학생이 시위를 주도	1960. 4.
	• 전국 최초 전북대 시위	1960.4.4
	• 김주열 열사(전북 남원 출신, 4월 혁명의 도화선)	1960.4
1970년대 (유신체제기)	• 전주고 학생들의 비상계엄 반대시위: 유신 계엄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위	1972.11.22
	• 은명기 목사(남문교회) 구속 사건: 유신 치하 첫 번째 성직자 구속피해자	1972.12.13
	• 기청 전주대회 사건: 1970년대 후반 전북 최대 가두 시위	1978.8.16
1980년대 (군부독재기)	• 대학의 5월 계엄철폐 투쟁과 이세종 열사(계엄 선포 이후 최초 희생자) 사망	1980.5.18
	• 임군수 열사(원광대 2학년) 광주에서 사망	1980.5.21
	• 전주 신흥고 광주학살 진상규명투쟁(5·27투쟁)	1980.5.27
	• 공수부대원(추정)의 박창신 신부와 신도(임을영) 테러	1980.6.25
	• 오송회(五松會) 간첩단 사건: 군산제일고 현직교사 8명과 전직 교사 1명	1982.11.25
	• 민주헌법 쟁취 민중대회 : 5만 명 참석	1986.5.31
	• 고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도민대회	1987.6.10
	• 민주화 실천 기간(6.22~26)과 6 26 전북도민 평화 대행진 (10만 명 추정)	1987.6.22.~29
	• 노태우 후보 유세방해 사건	1987.12.9
• 조성만 열사(김제 출신, 해성고 졸) 죽음과 추모시위	1988.5.15.~5.19	

〈표2〉 전라북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주요 사건

- 노동운동을 살펴보면 1983년 노동자의집이 설립된 이후에 ‘썬전자’ 노동자들의 407일 장기투쟁이 있었음. 소몰이투쟁과 우루과이라운드(UR)반대 쌀수입 저지 투쟁 등 전라북도 농민운동은 전국을 선도 하였음

〈표3〉 전라북도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주요 사건

구분	주요 사건	일시
노동운동	• 전북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산실, 노동자의 집 개설과 설립(익산 창인동성당)	1983
	• 민주노조운동의 출발: 태창메리야스 민주노조 사수투쟁	1981.2~1982.8
	• 전국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조작 사건	1986
	• 세풍합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	1986
	• 후레아혜순(독일계)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규탄투쟁	1987.4
	• 87노동자대투쟁	1987.4~9
	• 썬전자 노동자들의 노동탄압 규탄투쟁:407일 장기투쟁	1989.1~1990.4
	• 전북지역 농민운동의 시작,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 전주교구연합회 창립	1968
농민운동	• 소값 피해 보상 투쟁(소몰이투쟁)	1985.7~9
	• 미국 농축산물 수입 저지 투쟁	1986.8.31~9.3
	• 고추 생산비 보장과 전량수매 쟁취 투쟁	1988.10~1989.3
	• 쌀 생산비와 전량수매 보장 투쟁	1989
	• UR 반대 쌀수입 저지 투쟁	1990~1993

○ 군부독재에 맞선 인권과 민주화운동에서 전라북도 기독교단체를 빼 놓을 수 없음. 가톨릭과 개신교계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과 학생운동이 자리를 잡기 전에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의 최선두에서 활동하였고,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음

〈표4〉 전라북도 종교계의 반독재민주화운동

구분	주요 사건	일시
천주교계	•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1974)과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1976) 창립	1974.9
	• '3·1민주구국선언' 관련 문정현 신부 징역 3년 선고	1976
	• 파티마성당(전주)에 경찰기동타격대 난입, 문정현 신부 연행	1978.7.6
	•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문정현신부 재수감(긴급조치 9호 위반)	1979.7.30
	• 박창신 신부(익산 여산성당), 흥기 든 괴한 4명에게 피습	1980.6.25
	•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고문 살인의 종식을 위한 우리의 선언 등 전두환 정권기 민주헌법 쟁취 투쟁 전개	1986~1987
	• 부정조작 대통령 취임반대 시국기도회(전동성당)와 거리시위	1988.2.24
	• 전주교구 정평, 전북지역 성당 54개에서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5·18민중항쟁 9주년 기념 추모 미사 진행	1989.5.18
	• 전주교구사제단 주최 조성만 열사 3주기 추모미사와 거리행진	1990.5.15
	• 보안사 해체와 노태우 정권 퇴진 전북도민대회(전주 중앙성당)	1990.10.13
	• 국보법 철폐와 백골단 해체를 위한 시국기도회(전주 중앙성당)	1991.5.9
	• 고 강경대 애국 학생 추모 및 살인 만행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도민대회(전주 전동성당)	1991.5.13
	개신교계	• 은명기 목사 구속(유언비어 유포 혐의)
• 긴급조치 9호 위반 강희남 목사(김제 난산교회) 연행, 양교철 목사 중앙정보부 연행 등 개신교 성직자 연행과 구속		1975
• 김경섭 목사(전주 성광교회) 긴급조치 9호 위반 구속		1979.8
• 전북 민주헌법쟁취위원회 결성(전주 임마누엘 교회)과 시위		1986.4.28
• 성광교회를 중심으로 비상시국에 대한 입장 발표		1986.6.24
•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범도민대회 개최(전주 남문교회)		1986.8.16
• 남원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구국단식기도(총신교회)		1987.4.13
• 전북 목정평협 목회자 25명, 민정당 전북도지부 점거 농성		1988.11.28
• 한상렬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 시한부 농성(고백교회)		1988.11.29
• 노태우 정권의 문익환 목사 구속에 대한 시위		1989.4~9
•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시국기도회(성광교회)-경찰 교회 난입		1990.5.15
• 민주사회를 위한 전북기독교대책위원회 결성	1992.8.9	

3. 계승사업 방향과 과제

▣ 기념에서 계승으로 : 조례 개정과 종합계획 수립

- 매년 5월에 5·18유공자단체 주최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개최됨.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이 후원하고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오월 전복’을 기념함.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5·18 계기 교육 활동과 교과연계 수업 등을 진행함
- 전라북도 내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은 5·18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기념식이 핵심이며, 기념식과 더불어 관련 사진전과 세미나 등이 열림. 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서 진행되는 ‘계승’사업이 아닌, 특정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념’사업에 머물러 있음
- 동학농민혁명에서 이어진 전라북도 시대정신은 민주화운동만이 아니라 인권운동을 포함함.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 등 분야별 운동도 현재 기념하고 생활에서 계승해야 할 역사이자 시대정신임
- 첫째, 조례(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계승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함.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만이 아니라 인권운동까지 포함하여 계승사업의 범위를 확장해야 함. 또 기념사업을 총괄하는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계승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함. 민주화·인권 운동 계승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항도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

○ (위원회 설치 사례)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를 둔다.

- 둘째,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계승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전라북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인권운동 또는 인권 관련 상징사건, 인물 등에 대한 기념과 계승사업 계획은 없음. 특히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공공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음.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정 계획으로서 민주화운동 계승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서울시는 2020년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함

○ (기본계획 수립 사례)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군부독재에 맞선 인권 운동의 중요성 부각

- 독재정권과 산업화 아래에서 인권이 무시되는 일이 많았음. 특히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독재정권에 의해 고문 혹은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심하면 목숨마저 잃음. 그런데도 민주화운동에 인권 분야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 전라북도에서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인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음. 이와 관련한 역사 정립과 당시 활동에 대한 기념·계승사업이 필요함

■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의 기록화(2단계) 추진

- 이른바 ‘4월 전북’, ‘오월 전북’, ‘6월 전북’은 전국적 운동과 함께 진행됐지만, 다른 지역과 다른 전라북도만의 특성을 가짐. 그런데 지금까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은 4월 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전국적 운동의 연장에서 이해하고, 기념행사도 5·18을 중심으로 이뤄짐.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의 기록화가 필요함
 - 전주교 학생들의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반대 투쟁과 신흥고 학생들의 광주학살 진상규명 투쟁(5·27투쟁)처럼 전라북도에서 군부독재에 대항한 투쟁에 고등학생이 앞장섰고, 종교단체가 누구보다 앞장서 인권과 민주화를 수호하였음. 농민운동은 그 어떤 지역보다 선도적이었음
- 2008~2009년 진행한 전북지역 민주화 운동사 기초조사 보고서는 각 단체가 보관하던 운동사료 목록을 정리한 것임. 2012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펴낸 『전북민주화운동사』는 시간순으로 사건을 개괄한 것임.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주요 사건과 관련된 장소, 주요 단체와 인물 등에 대한 기록은 빠져 있음
- 운동 사료를 목록화하고 민주화운동을 개괄한 게 1단계 기록화라면,

주요 사건과 장소, 주요 인물과 사상(시대정신)을 정립하는 기록화 2단계가 필요함.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의 기억이 상실되기 전, 빠른 추진이 요구됨

○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관련 주요 단체 (1970~1990년대)

-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전북지부(1971, 위원장 신삼석 목사, 대변인 문정현 신부),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1974),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1976), 전북인권선교협의회(1977),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 전주교구연합회(1968), 한국가톨릭농민회 전북연합회(1976), 한국기독교농민회 전북지부(1982), 노동자의집(1983), 가톨릭노동청년회 전북지부(1978),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1984), 전북민주헌법쟁취위원회(1986),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전북본부(1987), 전북민주여성연합(1988, 전북민주여성회를 명칭 변경), 전북여성운동연합(1992) 등

■ 장소의 기억화 : 민주화·인권 운동 장소의 유적화

- 전라북도 내 민주화·인권 운동 관련하여 상징적 장소가 많음.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 사건 현장, 6·25 양민학살 현장, 407일 장기투쟁을 벌인 썬전자(현재 전주 팔복예술공장), 군부독재 반대와 인권 관련 시위의 대표 장소인 전주 가톨릭센터, 전주 중앙성당과 전동성당, 성광교회, 고백교회 등이 대표적임. 이외에도 고등학생으로서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선도한 전주고와 신흥고, 김주열·이세종·임균수·조성만 열사 추모공간, 노동운동의 시작을 알린 천주교 노동자의 집 등이 있음
- 이들 장소는 전라북도의 민주화·인권 운동을 상징하는 장소인데도 과거 역사적 현장을 기억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 예를 들어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경상남도 기념물(제277호)로 지정되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장소 등이 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음
- 민주화·인권 운동의 장소와 인물 등에 대한 2단계 기록화 사업을 토대로, 주요 장소에 대한 기억화 작업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주요 유적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의의를 정리하고, 이를 현장에 기록하여 누구나 기억할 수 있도록 함

○ (장소의 기억화 사례) 보스턴 자유의 길

- 보스턴은 미국 독립운동의 발상지로서, '독립전쟁'을 하나의 테마로 하여, 지역 전체에 걸쳐 있는 독립전쟁 관련 사적지 16개를 모두 연계하는 약 5km의 <자유의 길(프리덤 트레일)> 관광루트 개발
- 바닥에 빨간 라인을 그려, 이 라인만 따라가면 사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



○ (장소의 기억화 사례) 서울 민주화운동 역사지도



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 민주화·인권 운동 장소의 전라북도·시군 기념물 지정

-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가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5·18 민주화운동 유적지가 사적으로 지정되는 등 민주화운동 관련 장소가 유적화됨. 이에 반해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관련 장소 등이 기념물로 지정된 사례는 없음
- 전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미래유산을 지정하거나 기념물로 지정함. 기록화 사업을 통해 장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립하고,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을 대표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기념물 지정을 추진해야 함

○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기념물 대상 예시

- 전주 전동성당과 증양성당 : 전동성당과 증양성당은 1960년대부터 인권과 민주화 운동 관련 대표적인 기도회와 시위 장소였으며, 특히 전동성당은 1988년 10월 10일 의문의 방화사건이 발생함
- 김주열 열사 묘역, 이세종 열사 추모비 등



자료 : 전북일보 홈페이지

- 문화재(기념물) 지정은 원형 유지가 기본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존·관리·활용 종합시책을 추진하여 법적·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존·관리 차원에서 가장 선행되는 방안임. 기념물로 지정받으려면 문화재 성격을 규명하는 지표조사 등 연구와 학술대회 등이 병행되어야 함

▣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기념 공간(기록·역사관) 조성

-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이 건립되고, 지역별로 민주화운동 기념관과 기념공원 등 상징적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함. 전라북도에서는 인권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기록물을 모아 놓은 장소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체험·교육을 진행할 공간이 없음

- 현재 건립 중인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을 활용하거나, 또는 새롭게 전라북도역사박물관을 추진하여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교육·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함. 이와 더불어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과 관련한 기념공원·광장을 지정하여 관련 행사가 개최되는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어야 함

■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관련 출판과 예술콘텐츠 사업

- 동학농민혁명과 민주화운동(특히 5월)을 다룬 예술콘텐츠는 많으나, 전라북도 인권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예술콘텐츠는 찾아보기 어려움. 1980년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사진을 중심으로 전시회가 열리나, 그 외 예술 활동은 미흡함
- 기록화 사업을 토대로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관련 사건과 인물에 대한 출판 사업과 이와 연계하여 교육 사업을 진행함. 전라북도 특징이 돋보이는 사건과 인물에 대하여 예술적 콘텐츠로 개발,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정신을 대중적으로 확산해야 함

○ (민주화·인권 운동 관련 스토리 사례) 1980년 여산성당 박창신 신부 테러 사건

- 민주화·인권 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박창신 신부. 1980년 6월25일 여산성당에서 5·18 진상을 알리는 활동 중에 금마 공수부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에 의해 여산성당 사제관에서 칼과 쇠파이프로 테러를 당함. 이후 장애인이 됨

■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 계승 기간 설정, 행사 진행

- 5·18 기념식 기간만 행사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민주화·인권 운동을 계승하는 기간을 한 달 동안 지정, 기념식과 학술행사, 교육·체험, 전시, 예술행사가 종합적으로 개최되도록 행사를 진행함

○ (계승기간 설정 사례) 고양시 민주화 운동 기념 기간

- 고양시는 5월 15일~6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을 민주화운동 기념 기간으로 설정
-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6·15 남북공동선언 추모사업을 연이어 추진
- 5·18 민주화운동 추모행사: ▲민주주의 선포식 ▲5·18기념식 ▲민주화운동 관련 인물 초청 포럼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다큐영화 상영 ▲5·18 주먹밥과 추모리본 만들기 ▲평화퍼즐 맞추기 등 시민참여행사
- 6·10 민주항쟁 행사: ▲6·10항쟁 기념식 ▲토크 콘서트 ▲노래극 및 시민가요제 ▲6월 항쟁 사진 전시
- 6·15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기념 강연 및 토크콘서트 ▲청소년 토론대회 ▲청소년 평화통일주제 작품 발표 대회 ▲사진전 ▲희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시민참여행사
- 고양시민회(5·18 추모행사), 고양자연연구소(6·10기념행사), (사)고양평화누리(6·15기념행사) 등 고양시 시민운동·평화운동 관련 시민단체가 행사를 주관



<참고문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12), 『전북민주화운동사』, 서울: 도서출판 선인.
 신지은(2011), "장소의 상실과 기억 : 조르주 페렉의 장소 기록에 대하여", 『한국사회학』, 45(2): 232-256.

iSSUE
BRIEFING

이슈브리핑
2021. 05. 14 vol.246



발행인 권혁남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